

# 지니계수를 활용한 지역의 행복불평등 수준 분석

## :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불평등지수 산출\*

The Happiness inequalities of the region via Gini coefficient

서인석\*\* · 우창빈\*\*\* · 기영화\*\*\*\*

Seo, Inseok·Woo, Chanbin·Kee, Youngwha

###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논의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행복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본 연구는 과거의 생산중심에서 강조하였던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서 해소에서 행복분배 및 불평등의 해소에 관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경험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행복불평등과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Stevenson and Wolfers(2008)와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2011)의 연구결과를 일견 지지하였으나 행복불평등의 상위 자치구들에서 소득불평등 순위가 높게 나타났기에 이 소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더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둘째, 소득불평등의 격차에 비해 행복불평등의 격차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4622)

\*\* 송실대 SSK 커뮤니티웰빙연구단 전임연구원(주저자)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공동저자)

\*\*\*\* 송실대학교 교수(교정저자)

논문 접수일: 2015.8.4, 심사기간(1차, 2차): 2015.8.4~2016.1.5, 게재확정일: 2016.1.5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경우 소득으로 인한 개선보다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국가간 연구가 아닌 국가 내 지역의 비교 연구로 다루었고 그들의 행복불평등 격차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 내의 자치구 내에서도 행복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다소 컸음을 확인함으로써 각 지자체 및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행복불평등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지역의 행복불평등, 지니계수, 지역의 소득불평등

Throwing a buzzword whether happiness' s inequality exist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need to focus the view to distribute happiness instead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in who emphasized in the past. Especially, we tried to find these differences on Seoul Metropolitan.

Using samples from the Seoul Survey, firstly, this study found that income inequalities is uncorrelated with happiness inequalities of Seoul citizens, with the divides appearing geographically among the 25 “Gu” areas. Secondly, the gaps of inequalities are larger happiness than income. This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more urgent to identify and improve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instead of improved earnings in the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 Keywords: Happiness inequalities, Income inequalities, Gini coefficient

## I . 문제의 제기

행복에도 불평등이 있는가? 그간 우리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논의하여왔다. 소득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소득의 분배 자체가 삶의 만족에 대전제라고 여겨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소득 보다 행복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잣대라면 어떨까? 최근 Easterlin(1974)을 비롯한 많은 논의들은(Diener, Sandvik, Seidlitz, and Diener, 1993: 204; Diener and Biswas-Diener, 2002: 119) 소득의 무한한 증대가 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점은 상당히 많은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실증연구들을 통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소득의 분배 뿐만 아니라 행

복의 분배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해야 한다. 즉, 행복의 분배 수준에 대한 연구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Veenhoven(2005: 352)의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두 가지의 이유로 행복불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이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또 다른 이유는 행복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을 진단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 불평등연구의 핵심인 소득 불평등 차이보다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인간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간접적 지표일 뿐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간 소득 차이의 패턴은 행복 차이의 패턴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Ott(2005)의 연구나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관련한 변수로는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는 Veenhoven(2005)의 연구는 이러한 선상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즉, 삶의 결과(outcomes of life)를 직접적으로 다루어볼 수 있는 것은 행복의 불평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Gandelman & Porzecanski(2013)의 연구는 국가별 행복불평등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어서 행복불평등 지수를 산출한 선행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한편, 행복연구는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국가 간 불평등의 차이가 심화되어온 과거로부터의 영향을 이해된다. 인간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어 소득의 한계성을 크게 부각한 Easterlin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역시 초기 연구가 국가를 대상으로 부각되었고, 가장 많이 다뤄진 연구가 국가 간 연구였다. 즉, 행복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국가내의 상황이나 지역 보다는 주로 국가 간 연구에 초점이 모아졌다. 국가 간 차이를 통해 세계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 개인이고, 개인을 둘러싼 지역공동체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때 지역단위의 연구가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목적을 지닌다. 우선, 행복불평등이 부각된 배경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행복불평등의 지수 산출이 가진 이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행복불평등의 지수산출을 위한 방법으로 지니계수를 검토한다.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중 지니계수가 가장 적합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논의하에서 지수산출은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셋째, 서울시 차지구별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높은 지역들과 낮은 지역들을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때 소득평균과 행복평균을 행복지니계수와 비교하여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생산패러다임과 소득의 한계성: 이스털린 역설의 부각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GDP를 ‘발전’ 또는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해왔다(김윤태, 2009: 77).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급속한 소득증대에(구교준 외, 2014: 317) 집중해왔는데, 이는 전쟁이후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빈곤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빈곤문제는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방향으로 투영되었고, 동아시아 또는 남아메리카 등지의 많은 신생독립국들은 국가시스템이나 제도를 구현하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었던 시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굶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국가성장은 GDP로 설정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논리는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중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많은 문제들을 불러왔는데, 지역간 문제, 소득격차 등의 계층화 등의 사회구조화가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서구사회의 관점 역시 복지재정의 악화와 이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팽배와 함께 저개발국가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와 같은 문제는 경제적 성장을 이룬 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가 더욱 쉽게 수용되어왔다(기영화·서인석·이승중, 2004; 서인석 외, 2014a; 서인석 외, 2014b; 서인석 외, 2015).

하지만, Easterlin(1974)의 주장은 그와 같은 시장논리를 벗어나야 함을 지적한다<sup>1)</sup>. 그는 소득과 행복은 지속적인 선형관계가 아님을 주장하며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 등에 있어서 소득은 한계효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Easterlin, 2004; 기영화 외, 2014; 서인석 외, 2014a; 2014b). 그의 연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서양 사회의 실질임금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도 1973년~2004년 동안 실질임금은 2배로 증가했으나, 행복감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윤태, 2009: 77). 이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곡선의 (curvilinear) 형태를 지닌다는 것이며(Diener, Sandvik, Seidlitz, and Diener,

1) GDP를 통한 행복에 대한 한계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김윤태, 2009: 77). 만약 범죄가 늘어나고 감옥에 죄수가 많이 수감될수록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면 GDP는 증가한다. 그러나 범죄가 늘어나고 죄수가 많아질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회사에 과로로 질병에 걸린 직원들의 병원 진료비가 비쌀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고 GDP도 증가한다.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면 가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행복은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GDP가 가지는 경제지표로서의 효용성이 인간 행복의 지표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1993: 204; Diener and Biswas-Diener, 2002: 119),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다시말해,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 관계는 한계효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Easterlin(1974; 2004) 패러독스는 그래서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행복과 같이 주관적인 측면과 소득의 문제와 같은 객관적 물리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구교준 외, 2014: 318). Easterlin(1974; 2004) 패러독스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이 행복과 같은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로 당연히 전환될 것이라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소득과 같은 측면은 좋은 삶을 위한 기초적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다. 다만, 이것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asterlin(1974)의 논의는 다양한 관점으로 확대 연구되었다. Easterlin의 관점이 절대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Frey and Stutzer(2001: 90)는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임금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행복에 큰 정(+ )의 관계를 보였지만, 부유국(rich countries)에서는 그 효과가 작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해석하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이 행복의 중요한 인자였으나, 소득수준이 높아진 이후에는 인간행복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Inglehart, 1997: 61; Inglehart, 2009: 219)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Easterlin의 주장은 행복이나 주관적 효용이 상대적인 수준에 의한 주장에서도 지지를 얻는다. 즉, 개인의 주관적 효용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삶의 조건하에서 절대적 수준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구교준 외, 2014: 320) 것이다. 구교준 외(2014: 320)는 Duesenberry(1949)의 관점을 차용해 이를 설명하는데, 그는 개인의 효용은 자기 자신의 절대적 소비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소비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사회의 소득격차 또는 지역내 소득격차 수준이 현저하거나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소득도 비슷하게 증가하면 개인의 주관적 효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효용은 정체되고 소득효용의 한계는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기영화·서인석·남채봉, 2014). 결국 특정 국가의 사회환경 하에서 상대적 소득과 상대적 지위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면 지속적인 소득증가 하에서도 주관적 웰빙은 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의 증대 자체가 행복으로 귀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남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소득 자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때문에(Layard, 2006), 금액으로 평가되는 절대소득(absolute income)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소득(Clark & Oswald, 1998)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가진 남과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교하면

행복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누구와 비교하느냐, 어떤 기준 혹은 준거(reference)를 두어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특히, 주위사람, 이웃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신의 행복수준이 저하된다는 실증 연구(Luttmer, 2005)가 있다. 사회 정책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후자인 '지위의 쳇바퀴효과'인데, 특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위 과시적 소비는 행복을 저해하는 해로운 효과가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만들어 낸다(Frank, 1999; 2012).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큰 아주 값비싼 고급차량과 같은 재화들은 이를 가지지 못한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목적의 또 다른 재화를 사고 싶은 욕구를 부채질한다. 이렇게 필요 이상 비싼 상품들, 사치재,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지위재는 남들 또한 경쟁적으로 사고 싶어지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을 낮추므로, 마치 공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 행복의 효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심하게는 상대적 차이가 더 중요해 거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불평등 문제 또한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득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하였지만, 이제 소득이 아니라 행복이 중요한 문제라면 행복의 불평등을 주요 주제로 상기해야 한다. 즉, 불평등 문제는 소득에서 행복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소득과 행복, 그리고 불평등

대부분의 모든 국가의 정당이 좌익과 우익으로 구분된 것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어떻게 다루느냐와 관련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고속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평등주의(egalitarianism) 사이의 철학적 논쟁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웰빙에 극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평등주의자는 불평등의 감소를 주장한다. 주관적 만족지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회의적 태도 때문에 대부분의 공리주의자와 평등주의자의 논쟁은 소득 극대화 및 소득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모아왔다. 그러나, 공리주의 또는 평등주의 모두에게 소득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행복연구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이 논쟁에 부여하는 것이다(Gandelman & Porzecanski, 2013).

구체적으로 불평등 연구에 대한 흐름은 Stevenson & Wolfers(2008)의 논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Stevenson & Wolfers(2008: 536-538)에 의하면 불평등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것으로써 1972년 이후로 증가하였으며, 초기시점에는 높

은 수준의 대학학비로 인해 불평등은 크게 상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실증연구에 기초해 1972년 이후에 발생한 학력차이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에 이르러 불평등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Goldin and Katz, 2007). 즉,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Goldin and Katz, 2008: 139) 그 뒤의 소득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회의 불평등을 시작하였지만, 실제로 높은 대학학비는 가계의 수준에 기초하게 되기에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가계에 초점화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소득불평등은 가계의 생계에 직결되기에 가계들은 소득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 즉 보험, 저축 등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Jensen and Shore, 2008). 가계가 보험, 저축 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에 소비는 소득에 비해 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의 연구는 더 낡은 물질적 안녕이며, 이것이 불평등의 초점이 되었으며, 1980년대에 소비불평등의 연구가 가계지출에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였다(Johnson and Shipp, 1997; Cutler and Katz, 1991; Attanasio, Battistin, and Ichimura, 2004). 하지만, 1990년대에는 이러한 소비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의 상승과 관련된 연구로 부각되게 되었다. 기술전문가들은 사실 소비수준에 비해 소득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며, 이들이 적절하게 불평등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Krueger and Perri, 2006)

하지만, 그는 이러한 물질지향적 경향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변화되었다고 강조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레저시간을 불평등의 중요 변수로 간주하는데, 레저시간은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 간에 차이가 크기에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데 관심을 둔다. 이렇게 볼 때 물질지향적 관점에서 개인의 여가활동 시간 등의 비물질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불평등에 대한 연구경향이 주관적웰빙의 연구와 유사한 방향으로 조사되고 있고, 삶에 있어서의 행복은 재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비재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불평등 연구는 행복 연구의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는 왜 행복의 불평등을 바라봐야 하는가? Veenhoven(2005: 352)의 몇 가지 논점은 이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이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설문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유용하다. 물론, 행복에서의 불평등은 국가맥락에 따라 상이한 정책개입에 따른 제도상태와의 연결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행복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을 진단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 불평등연구의 핵심인 소득 불평등 차이보다 더 좋은 지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Ott(2005)는 국가간 소득 차이의 패턴은 행복 차이의 패턴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결과로 보여주었다. 심지어 Veenhoven(2005)은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관련한 변수로는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즉, 자원에 기반한 불평등의 측정은 삶의 결과(outcomes of life)를 간접적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령 소득은 장수나 행복을 측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많은 연구들은 국가 간 행복불평등의 연구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Veenhoven과 그의 관점에 유사한 연구들이었다. 우선, Kalmijn and Veenhoven(2005)은 국가 간 행복 불평등의 측정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였다. 그들은 다양한 분산통계량을 분석하고, 국가 간 행복의 양적 차이를 적합한 값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4가지 통계량으로 4분위 차이, 평균차이와 대응표본 평균차, 편차가 활용되었다. 이들은 편차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편차를 사용할 것은 강조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국가 간 행복불평등의 비교연구 및 시간에 따른 국가 간 행복불평등 측정이 진행되었다.

Ott(2005)는 행복연구에 있어서 양적 측면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공리주의들과 행복을 더 많은 평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자 간의 갈등을 다루었다. 그는 80개 국가에서 행복 불평등과 행복수준사이의 통계적 상관성을 평가하고, 평균 행복지수가 높았던 국가들에서 행복의 표준편차가 더 낮았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행복의 수준과 분산 사이의 사회학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불평등은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소득불평등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설명방식은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Veenhoven and Kalmijn(2005) 역시 상기된 공리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해 다루었다. 그들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사회적 지표를 제안하였다. 그들의 IAH(Inequality Adjusted Happiness)는 가치와 가치들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을 동등하게 다룬다. IAH는 경제적 발전,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같은 사회배경적 변수 역시 다루었다. 그래서 사회적 진보를 다루는데 있어 유용하다. 즉, 경제적인 가치인 소득 및 심리적 가치인 행복을 동등하게 다루어 이를 지표화함으로써 기존의 공리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Veenhoven(2005)은 특히 평등주의적 관점에 친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불평등이 근대화(modern society)의 부산물임을 주장한다. 즉 불평등을 좋은 삶을 위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기 보다는 행복 또는 장수와 같은 삶의 실제적 결과물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그는 10년 간 14개 근대화국가에서 행복의 불평등이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변화가 있었으나, 예측과는 다소 다르게 행복 불평등의 차이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0개 국가를 비교해본 결과 이 기간 내의 대부분의 사회가

행복의 불평등이 낮았다. 이에 기초해 그는 형평성은 점차로 더 낮아질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상기의 몇 가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측정의 영역에서는 소득과 행복의 차이는 잘 다루지 않았다.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효용은 소득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까지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왔다. 행복이라는 개인의 '효용'은 여전히 소득 혹은 국민총생산(GNP)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주로 다루어진 것이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총생산의 영역으로써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적 부, 양적 성장에 치우침에 따라 행복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행복은 오히려 사회적 관계나 자기결정 등 소득의 영역을 넘어선다. '어떠한 결과(소득)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에서 얻어진 것인가(삶의 의미)? 그리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등의 질의가 중요해진 것이다. 서문기(2015: 130)의 지적처럼 시장기제를 강조했던 러시아나 브라질은 성장 및 분배에 관한 국가실패로 인해 삶의 질이 왜곡되거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더 길고 경쟁이 치열하며 자살 사례가 매우 많은 한국에 비해 부탄의 행복과 환경 중심의 정책을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성장 자체보다는 소득분배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사회갈등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삶의 질과 행복수준에 더 영향을 준다는 관점 역시 소득의 절대치로는 행복을 가늠할 수 없음을 뜻한다 (Veenhoven and Hagerty, 2011; 서문기, 2015: 120).

결국, 소득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기대소득과 실제소득 간의 격차, 미래의 안정 전망, 사회와 이웃에 대한 신뢰, 참여, 낮은 부패 수준,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 수준과 같은 사회통합적 요소들이 시민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여유진, 2015: 42)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해소가 소득의 분배 또는 평균적 수준으로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 행복의 분배 또는 평균적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또는 소득수준이 가장 강력한 지역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행복의 수준, 행복의 불평등을 측정하려는 연구는 국외연구에서 소수 찾아볼 수 있을 뿐(Veenhoven, 2005; Stevenson and Wolfers, 2008;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 2011; Gandelman & Porzecanski, 2013; Dutta & Foster, 2013), 국내 연구는 사실상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컨대, 불평등은 오랜 기간의 주제로 소득과 관련지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소득이 곧 행복이며, 소득이 평등하다는 것은 삶의 질 및 평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Easterlin의 주장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이 행복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더 이상 소득불평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복의

불평등을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행복 불평등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 역시 국가단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내부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국가 내부를 중심으로 지역내의 행복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 3. 선행연구 검토

Veenhoven(2005)은 국가들에서의 행복불평등을 연구하였다. 행복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비교는 Buchanan(1953)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9개 국가를 대상으로 1948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Cantril(1965)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4개국을 대상으로 1960년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되었다. 그리고, Cantril의 연구는 이후 Gallup(1965)로 이어져 글로벌서베이로 이어졌으며, 이때는 세계 각국 모두가 평가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 Veenhoven(2005)은 90개 국가의 자료를 비교함과 동시에 12개 국가에 대해나는 25년에서 40년 간의 시계열자료를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 간 행복불평등 뿐만 아니라 국가내 행복불평등 수준도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Stevenson & Wolfers(2008)는 미국에서의 행복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개인 만족 및 행복의 수준과 분포가 1972년에서 2006년 동안에 변화한 것을 분석하였다. 이 기간에 행복의 총합은 증가하지 않았던 반면 1970년 이후로 행복의 불평등은 대체적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집단들 사이에서 행복의 수준에 있어 커다란 변화였다. 흑인-백인 행복차이가 3/2정도 감소하였고, 성별 행복차이도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소득분포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역시 감소하였지만, 교육에 의한 행복차이는 확대된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는 행복의 분포에 있어서 분파된 변화(1970년과 1980년 사이의 집단내 불평등의 급격한 감소)를 측정함과 동시에 인구학적 집단들의 차이를 통해 불평등을 살펴보는 방식의 통합된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행복의 불평등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금전적 요인(교육, 성별, 인종 등)이 웰빙의 분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2011)는 행복불평등이 증대하는 이유(Why has happiness inequality increased)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들에서 간과되었던 행복불평등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1991년과 2007년 사이에 독일에서 관찰된 행복불평등의 증가를 분석하였다(GSOEP: 독일 사회경제패널자료 활용). 행복불평등 수준의 총합을 특정 집단으로 분해하여 그 차이를 보려는 분해방법(decomposi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행복불평등 상승은 노동시장조건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고 제시하였으며, 교육의 증대는 행복불평등에 감소를 가져왔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에 증가는 행복불평등에 증가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교육, 노동시장성과를 강화하는 정책은 행복불

평등을 낮추고, 잠재적 사회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Gandelman & Porzecanski(2013) 역시 행복불평등(Happiness Inequality)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소득과 행복에 대해 지니계수를 계산하고, 효용수준에 대해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였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행복불평등의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보다는 낮았다. 분석결과, 행복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1/2수준이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불평등의 큰 부분은 삶에 있어서 금전적 차원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Dutta & Foster(2013)는 Stevenson and Wolfers(2008)처럼 미국에서의 행복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의 GDP는 웰빙의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행복은 웰빙의 대안적인 지표로 부상하였고 연구는 주로 행복 수준의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춰왔다.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복의 분포는 불평등의 평가에 있어 다뤄져야 하는 측면이다. 비록 서열자료의 한계의 한계성으로 인해 표준적인 불평등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행복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 높아졌다. 이 연구는 미국 1972년에서 2010년까지의 분포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서열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적용하여 행복분포의 모호성과 서열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행복불평등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인종, 종교에 의해서 불평등의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표 1> 선행연구의 주제, 대상, 방법, 자료

구 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
Veenhoven (2005)	행복불평등 측정	90개 국가	표준편차 및 지니계수	90개 국가의 횡단면 자료 및 12개 국가의 시계열자료
Stevenson and Wolfers(2008)	행복불평등 측정	1972년에서 2008년까지의 미국인	분해분석법	GSS(General Social Survey 1972-2008)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 (2011)	행복불평등 측정	1991년에서 2007년까지의 독일국민	분해분석법	1991-2007 GSOEP(독일 사회경제패널자료)
Gandelman & Porzecanski (2013)	행복불평등 측정	2006년도 113개국	지니계수 및 효용수준 분류	2006 Gallup World Poll
Dutta & Foster(2013)	행복불평등 측정	1972년에서 2010년까지의 미국인	서열측정을 위한 모형개발 및 적용(분해법 보완)	GSS(General Social Survey 1972-2010)

요컨대, 각 연구들은 행복불평등을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통해 연구를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구의 양은 일반화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으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에 발맞춰 본 연구는 행복의 불평등 수준을 서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소득 수준과 별개로 나타날 수 있는 행복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행복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많은 국가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 2015년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니계수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별 수준을 도출하고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방법: 지니계수를 활용한 행복불평등의 측정

선행연구들은 행복불평등의 존재를 인구학적 집단 내부와 인구학적 집단 사이에서 조사해왔다(Stevenson & Wolfers, 2008: 533-534). 예를 들어, '부자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행복하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하다', '결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하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행복불평등을 고려할 때는 측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불평등을 측정해오던 방식을 준용한다면 측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소득을 대상으로 측정하던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에도 논의가 필요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가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경준(2007)의 관점은 유용하다. 그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많으나 로렌츠 곡선상의 비교와 같이 순위로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수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소득불평등도지수를 비교검토하기 위해 적합한 것은 로렌츠일치(Lorenz-consistent)지수이고, 로렌츠 곡선을 활용한 가장 일반적인 지수는 지니계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불평등 지수의 산출은 로렌츠 곡선에 기초한 지니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공평하게 분배하는 수준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비율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0은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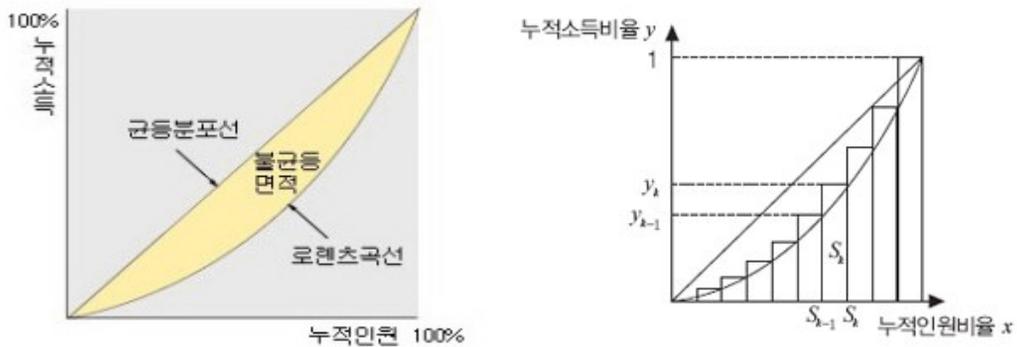
수준을 의미하며,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이 높아져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이상이면 매우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0.4이하의 경우에는 낮은 불평등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이러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다양한 대상의 집중도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C. Gini(1912)는 각 구성원의 계층 간 소득불평등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유항근, 2004: 14).

$$G = \frac{\Delta}{2\mu} \dots\dots\dots(식1)$$

여기서  $\mu$ 는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분자의  $\Delta$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elta = \frac{1}{n(n-1)} \sum_{i=1}^n \sum_{j=1}^n |x_i - x_j| \dots\dots\dots(식2)$$

이때 구성원들의 소득을  $x_1, \dots, x_n$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식1)과 (식2)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토대로 소득을 행복으로 치환하여 불평등지수를 산정하였다.  $\mu$ 는 행복지수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x_1, \dots, x_n$ 는 해당 서울시 자치구에 소속된 개인들의 행복지수를 의미한다.



<그림 1> 로렌츠 곡선의 추정방식

2) 2010년 기준으로 국가별 소득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이 0.31이며, 유럽국가들은 0.3미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0.408, 중국은 0.481로 확인되었다(OECD 통계포털). 이러한 결과로 볼 때 0.3미만은 불평등이 낮은 수준이고, 0.4이상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한국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판단기준은 현실에 기초할 때 0.3미만, 0.3이상에서 0.4미만, 0.4이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 2.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지니계수라는 분석방법을 통해 행복불평등을 측정 한 후 이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통해 소득과 행복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가지의 연구질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소득과 행복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스털린의 주장에 기초하여(서인석 외, 2015) 소득불평등 역시 행복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단순히 돈의 분포와는 다르게 행복의 분포는 이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이다. 근본적으로 소득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행복을 중시하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다면 둘 간의 관련성은 낮아지게 된다. 즉, 행복불평등의 수준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은 것입니다. 이때 귀무가설은 행복불평등의 수준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관계가 있다가 된다. 이때 두 지니계수 간의 비모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25개의 자치구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수(N)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 2> 연구의 질문 및 방법

연구가설		연구방법	분석단위
H1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낮을 것이다.	비모수 상관분석	개인
H2	상대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수준에 비해 행복불평등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을 것이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개인

다른 하나는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이 다른 양상을 보일지라도 지니계수의 수치는 소득불평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소득은 행복에 비해 가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는 행복은 소득과 같이 수치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부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옆집의 생활스타일(예: 취미, 문화생활, 여행, 여가생활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뿐이다. 즉, 행복불평등은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므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행복불평등의 수치가 소득불평등에 비해 낮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평균 등의 수치는 전체적으로 소득의 지니계수가 높을 것이라 가정한다.

한편, 행복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각각의 질문이다. 서열측정은 가장 불행한 상태 '0'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상태 '10'까지 척도가 구분되어 있어 각 수준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0점-10점 척도)<sup>3)</sup>.

<표 3> 행복지수 측정문항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가장 행복한 상태
-----------------	---	---	---	---	---	---	---	---	---	---	----	-----------------

1) 자신의 건강상태 .....	(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	(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    )점
4) 가정생활 .....	(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	(    )점

자료: 2012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설문지

### 3.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자료로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2012”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된 자료로써 ‘e-서울통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만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4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구원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가구원 조사자료의 경우 만족도 조사와 소득수준에 대한 조사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가구조사는 20,000가구가 조사대상이며, 가구원은 49,75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표 3>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응답자의 일반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4034	48.3
	여성	25724	51.7
연령	10대	4118	8.3
	20대	7436	14.9
	30대	9018	18.1
	40대	12030	24.2

3) 서울시 도시정책조사의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써 유용성과 적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였다.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50대	9664	19.4
	60대 이상	7492	15.1
학력	중학교 이하	8371	16.8
	고등학교 이하	16483	33.1
	대졸 이하	24336	48.9
	대학원 이상	568	1.1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638	1.3
	100-200만원 미만	2671	5.4
	200-300만원 미만	5815	11.7
	300-400만원 미만	12831	25.8
	400-500만원 미만	12749	25.6
혼인상태	500만원 이상	15054	30.3
	기혼	32586	65.5
	미혼	13616	27.4
	이혼/별거	1395	2.8
거주지	사별	2161	4.3
	종로구	1203	2.4
	중구	1090	2.2
	용산구	1578	3.2
	성동구	1656	3.3
	광진구	1977	4.0
	동대문구	1484	3.0
	중랑구	2191	4.4
	성북구	2164	4.3
	강북구	1979	4.0
	도봉구	1898	3.8
	노원구	2464	5.0
	은평구	2186	4.4
	서대문구	1704	3.4
	마포구	2006	4.0
	양천구	2155	4.3
	강서구	2367	4.8
	구로구	2286	4.6
	금천구	1666	3.3
	영등포구	2106	4.2
동작구	2175	4.4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관악구	2483	5.0
	서초구	1978	4.0
	강남구	2220	4.5
	송파구	2645	5.3
	강동구	2097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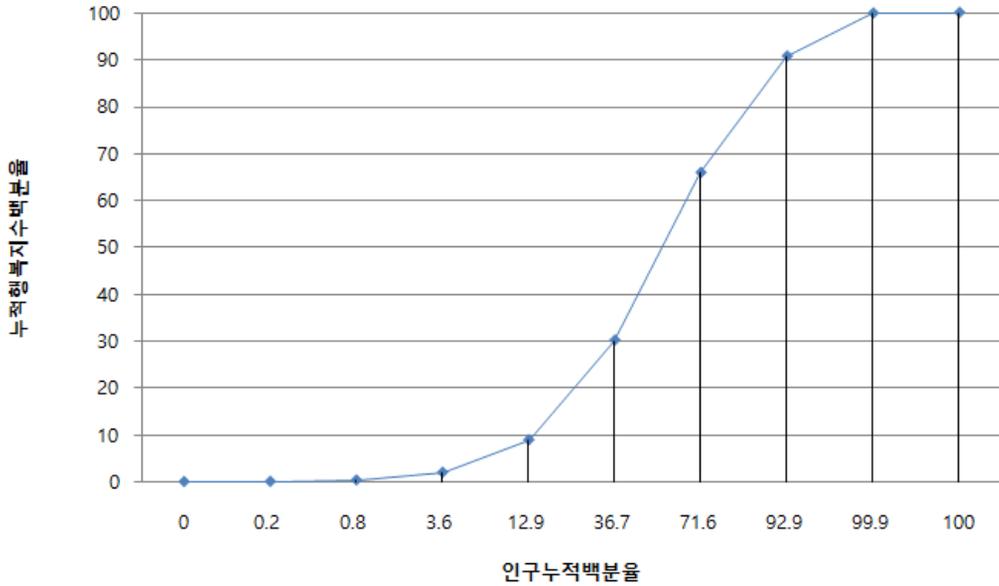
자료: 2012 서울도시정책지표조사(2013)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역시 40대가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나(1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5%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분포가 고른 편이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하가 가장 많은 4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이상은 1.1%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편중은 서울시의 전체 학력수준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할당 표본의 결과이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대략 2배정도 많았다. 거주지의 경우 자치구별로 3%~4% 사이에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자료인 서울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표본 할당추출 조사방식을 적용하여 수집한 것으로서 서울시민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이에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 IV. 분석결과 논의

### 1. 서울시의 행복불평등 지수 산출

〈그림 2〉은 인구누적율과 행복지수누적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로렌츠 곡선이다. 완벽한 선형관계는 형성하고 있지 못하지만, 인구누적율이 약 13% 수준에서 누적행복지수는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누적율 약 37% 수준에서 누적행복지수누적율 30%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구누적율 약 70%에서 행복지수누적율 약 65%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인구누적율 93%에서 행복지수누적율이 90%에 해당하였다.



<그림 2> 로렌츠 곡선

구간 사이의 넓이를 토대로 구한 불평등 구간의 넓이는 1520.3이며<sup>4)</sup>, 이를 반인 5,000으로 나눈 값이 지니계수가 된다. 지니계수는 0.304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년 서울시 전체의 지니계수는 0.304였다. 2012년 한국이 0.307이었음을 감안할 때 행복지니계수의 수준은 소득지니계수보다 양호한 수준이었다<sup>5)</sup>.

## 2. 서울시 자치구별 행복불평등 분석

<표 4>은 행복불평등, 소득불평등, 행복지수 편차 및 평균을 서울시 자치구별로 도출하고 제시한 결과이다. 행복불평등이 가장 심한 자치구는 강남구로 확인되었다. 강남구는 소득불평등도 가장 높았다. 반대로 강동구는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모두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4) 100\*100의 넓이라는 점에서 총 면적은 10000에 해당하며, 이 중 삼각형의 넓이는 5000이다.

5) <한국 연도별 지니계수>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지니계수	0.312	0.314	0.314	0.31	0.311	0.307
전국(2인 이상 비농가)	지니계수	0.295	0.296	0.294	0.288	0.288	0.285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각각의 통계량

자치구	행복지수 편차	행복지수 평균	소득불평등 <sup>6)</sup> (지니계수)	소득지니 순위	행복불평등 (지니계수)	행복불평등 순위
강남구	0.67	7.3	0.407	1	0.368	1
서초구	0.77	7.21	0.312	20	0.364	2
서대문구	1.1	7.16	0.345	9	0.363	3
송파구	1.03	7.14	0.362	5	0.356	4
강서구	0.89	7.12	0.355	8	0.348	5
중구	1.18	6.98	0.361	6	0.339	6
양천구	0.8	7	0.29	23	0.317	7
성북구	0.98	6.93	0.297	22	0.315	8
금천구	1.13	6.89	0.335	14	0.313	9
강북구	0.99	6.9	0.343	10	0.31	10
관악구	1.24	6.82	0.372	4	0.307	11
종로구	1.19	6.84	0.315	18	0.304	12
구로구	1.08	6.85	0.341	12	0.303	13
동작구	0.91	6.91	0.328	16	0.301	14
마포구	1.13	6.81	0.327	17	0.299	15
도봉구	1.05	6.78	0.341	13	0.29	16
영등포구	1.04	6.7	0.334	15	0.275	17
은평구	1	6.72	0.385	2	0.275	18
광진구	1.02	6.69	0.29	24	0.273	19
용산구	1.02	6.67	0.358	7	0.266	20
노원구	0.75	6.73	0.315	19	0.26	21
중랑구	1.03	6.37	0.343	11	0.207	22
동대문구	1.15	6.27	0.375	3	0.196	23
성동구	1.32	6.11	0.311	21	0.181	24
강동구	1.38	6.05	0.271	25	0.174	25
전체	1.03	6.80	0.34	-	0.304	-

행복지수평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우선, 행복지수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서 10점 만점에 7.3점을 나타내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초구가 7.2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 이외에 7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낸 지역은 서대문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였다. 서대문구를

6) 김태형 외(2013)의 2010 서울시복지패널자료에 기초한 지니계수산출값을 활용한 것으로써 유사 시점의 타 연구결과인 소득 지니계수를 본 연구결과인 행복지니계수와 비교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치구별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가구별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김태형 외, 2013: 25) 도출하였다.

제외하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양천구로 요약되는데, 이들은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서인석 외, 2015: 142). 이러한 평균수치는 행복불평등이 매우 높은 지역은 지역소득의 불평등도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관계성이 약하다고 주장한 Stevenson and Wolfers(2008)와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201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체 상관계수는 아닐지라도 행복지니수치의 순위 10권 중에서 소득불평등 순위가 6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행복지수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로 6.05점을 나타내었다. 그 이외에 6.5점 미만의 지역은 중랑구 6.73점, 동대문구 6.27점, 성동구, 6.11점으로 확인되었다. 서인석 외(2015: 142)의 연결결과에서는 중랑구(16위)와 성동구(13위), 동대문구(25위)를 보였는데, 중랑구와 성동구는 중위권에 동대문구는 최하위 수준의 지역소득을 나타내었다. 낮은 순위에서는 행복불평등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성이 높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행복도가 높은 지역은 소득이 높았지만, 행복도가 낮은 지역이 반드시 소득이 낮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결과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6> 소득불평등 및 행복불평등의 최고/최저 간 격차

구 분	소득불평등	행복불평등
최고	0.407	0.368
최저	0.271	0.174
차	0.136	0.194

셋째, 서울시 전체의 행복불평등은 0.304였다. 이는 종로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시 전체에서 1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25개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분포 상태는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소득불평등이 최하 0.271에서 최고 0.407로 그 차이는 0.13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행복불평등은 최하 0.174에서 최고 0.368로 그 차이는 0.194의 차이를 보여 소득불평등에 비해 행복불평등이 더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7>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상관계수

구 분	행복불평등
Kendall의 tau_b	.171
Spearman의 rho	.246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결과는 서울시 자치구의 소득 불평등과 행복불평등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sup>7)</sup>. 소득불평등 상위 10곳과 행복불평등 상위 10개에서는 6곳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득불평등 및 행복불평등이 10위권 이하의 낮은 지역에서는 상호 일치성이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상위수준인 소수의 사례에서는 다소간의 관계성이 보였던 바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상관성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3. 연구가설의 검증 및 행복불평등 지수의 의미

본 연구는 크게 2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으며, 2번째 가설은 3가지의 검증방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낮을 것이다(H1)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마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가설은 의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가설로 제시한 3가지 검증 대상인 최소값(H2a), 최대값(H2b), 평균(H2c)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의 수치가 행복불평등의 수치 보다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비가시성으로 나타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지라도 연구결과에서는 이를 기각시키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가설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지 않았다.

<표 8> 가설검증 결과

연구가설		검증대상	결과
H1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낮을 것이다.	상관계수	기각되지 않음
H2a	상대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최소값에 비해 행복불평등의 최소값은 낮을 것이다.	최소값	기각되지 않음
H2b	상대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최대값에 비해 행복불평등의 최대값은 낮을 것이다.	최대값	기각되지 않음
H2c	상대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평균값에 비해 행복불평등의 평균값은 낮을 것이다.	평균	기각되지 않음

한편,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분석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가 국가

7) 본 분석에서 상관계수는 Kendall의 tau 값과 Spearman의 rho 값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는데, 이 상관계수는 비모수 상관계수로서 30개 미만일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였다.

대상으로 다루었던 국가간 연구를 국가 내 지역내의 비교 연구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Veenhoven(2005)의 연구에서 국가간 행복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밝혀던 것처럼 특정 지역인 서울시 내의 자치구 내에서도 행복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다소 컸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자체 및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소득 불평등 뿐 아니라 행복불평등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Stevenson and Wolfers(2008)와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2011)가 확인한 행복불평등과 소득불평등 간의 비상관성이다. 과거 많은 연구들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역시 높아진다고 가정했던 시기가 있었다. 최근 Eaterlin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Veenhoven을 중심으로 한 행복연구들이 이를 비판하고 행복과 소득 간의 관련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초기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은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주었을지라도 경제적 수준이 상당수준으로 높아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61; Inglehart, 2000: 219). 본 연구에서도 지역 사이에 행복불평등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행복불평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행복불평등이 높은 소수 지역들에서는 소득불평등 역시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행복불평등이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행복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화두로 던지며, 본 연구는 과거의 생산중심에서 강조하였던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서 해소에서 행복분배 및 불평등의 해소를 관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경험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불평등이 부각된 배경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지니계수를 기법으로 적용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행복불평등의 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행복불평등지수 분석결과 행복지수의 1위에서 5위까지 순위는 행복불평등 1위에서 5위까지의 순위와 동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소득불평등도 서초구(20위)를 제외하면 모두 10위권 내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불평등과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성

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Stevenson and Wolfers(2008)와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2011)의 연구결과를 일견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불평등지수의 순위 10권 중에서 소득불평등 순위가 6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이에 대한 의문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가 수반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서울시 내 지역에 국한된 지역맥락적 특성인지 아니면 타 지역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화된 가설인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시 전체의 행복불평등은 0.304였다. 이는 종로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시 전체에서 1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25개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분포 상태는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소득불평등이 최하 0.271에서 최고 0.407로 그 차이는 0.13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행복불평등은 최하 0.174에서 최고 0.368로 그 차이는 0.194의 차이를 보여 소득불평등에 비해 행복불평등이 더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국가대상으로 다루었던 국가간 연구를 국가 내 지역내의 비교 연구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Veenhoven(2005)의 연구에서 국가간 행복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밝혀던 것처럼 특정 지역인 서울시 내의 자치구 내에서도 행복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다소 컸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자체 및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행복불평등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대체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또한 행복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불평등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Veenhoven, 2005; Stevenson & Wolfers, 2008), 본 연구도 전체적으로는 이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고려해야할 부분은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 불평등의 수준 또한 높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록 국가 내의 지역 수준에서 비록 일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기는 하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단편적으로 선행연구가 제시했던 일반적인 정책적 방향인 높은 소득과 낮은 실업률, 교육제공 등(Becchetti, etc., 2011)만으로 행복불평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대적 격차가 행복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 있어서 전체 행복수준의 증진 문제와 별도로 행복불평등의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 즉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행복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에 있어서의 차이와 불평등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성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의 시작은 결국 커뮤니티의 개발로

시작되어야 한다. 자연스런 교류가 마련되고 소통의 장이 마련될 때 개인으로써 타인과 비교하기 보다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행복의 감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각 구별 행복불평등의 차이가 구별 소득불평등의 차이보다도 커서, 이러한 행복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차이가 지역 경계인 구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지역기반의 사회통합적 정책이 필요성을 본 연구결과는 부각시킨다. 나아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의 향후 사업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볼 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지역정책 목표로써 주민의 행복수준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후 나타날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생활권의 범위를 규명하고,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몇 가지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우선, 선행연구들은 교육, 인종,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들이 소득보다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내고 있다. 그러한 차이는 전체 효과를 각 집단으로 분해해서 구분할 때 적합한 연구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의의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Dutta & Foster(2013: 396)가 지적한 것처럼 서열자료 또는 범주화자료 일 때 표준오차, 변량, 지니계수와 같은 불평등의 표준화된 측정은 다른 척도들에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sup>8)</sup>. 그들은(Dutta & Foster, 2013: 396) 이처럼 서열자료의 변화에 따른 측정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시도한 행복불평등은 행복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한 면을 차지하고 있기에 의의가 있다. 향후의 연구들은 다른 지역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내의 행복 불평등 수준을 보다 깊이있게 확인하고, 행복불평등의 차이가 지역적 수준에서만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 등 집단별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8) 예를 들면, 일반적인 서열척도는 1에서 5까지이나 행복과 관련된 측정에서 있어서는 서열척도는 1에서 10으로 구분되거나 이 이상의 척도 또는 이 이하의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기영화·서인석·남채봉. (2014). 커뮤니티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 지방행정연구, 28(4): 39-71
- 기영화·서인석·이승중. (2014). 커뮤니티웰빙의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243-269.
- 김태영·권세원·이운진. (2012). 서울시민의 개인 및 지역 효과에 의한 건강불평등. 서울시연구, 13(3): 15-35.
-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75-90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111-137
- 서인석·이승중·기영화. (2014a).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243-269
- \_\_\_\_\_. (2014b).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101-130
- 서인석·우창빈·기영화. (2015).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과 상대성 검증. 지방행정연구, 29(1): 127-152.
- 여유진. (2015).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보건복지포럼, 36-43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KDI 정책포럼, 183.
- Attanasio, Orazio, Erich Battistin, and Hidehiko Ichimura. (2004). What Really Happened to Consumption Inequality in the US. NBER Working Paper No. 1033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
- Becchetti, L., R. Massari., & P. Naticchioni. (2011). Why has happiness inequality increased?: Suggestions for promoting social cohesion. IZA 2011 Conference papers.
- Clark, A., & Oswald, A. (1998). Comparison-concave utility and following behaviour in social and economic sett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0: 133-155.
- Clark, D. A. (2002). Vision of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Value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Cutler, David, and Lawrence Katz. 1991.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 Disadvantag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pp: 1 - 74.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Diener and Biswas-Diener. (2002).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John Wiley & Sons.
- Dutta, Indranil and James Foster. (2013). Inequality of happiness in the U.S.: 1972-201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9(3): 393-415.
- Duesenberry, J.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2004).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Income?: Caveat Emp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70: 243-255.
- Frank, R. H. (1999). *Luxury Fever: Money and Happiness in an Era of Exc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y, B., & Stutzer, A. (2001).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1: 918-938.
- Gandelman, Néstor and Rafael Porzecanski. (2013). Happiness Inequality: How Much is Reasonab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1): 257-269.
- Goldin, Claudia, and Lawrence Katz. (2007). Long-Run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Narrowing, Widening, Polariz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pp: 135 - 16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Inglehart, R. (2009). Democracy and happiness: What causes what? In A. Dutt, K. & B. Radcliff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Northampton, MA: Edward Elga.
- Jensen, Shane, and Stephen Shore. (2008).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Volatility. Unpublished manuscript. John Hopkins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Baltimore.
- Johnson, David, and Stephanie Shipp. (1997). Trends in Inequality Using Consumer

- Expenditures: 1960 to 1993.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 133 - 152.
- Kalmijn, W. and R. Veenhoven. (2005). Measuring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In Search of Proper Statistic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357-96.
- Krueger, Dirk, and Fanrizio Perri. (2006). Does Income Inequality Lead to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and Theory. *Review of Economic Studies*, 73: 163 - 193.
- Layard, Richard. (2006).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Books.
- Luttmer, Erzo F. P.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Ott, J. C., (2005). Level and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Does Greater Happiness of a Greater Number imply Greater Inequality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397-420.
- Stevenson, Betsey, and Justin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Happiness: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 pp: 1 - 87.
- Veenhoven, R. (2005). Return of inequality in modern society? Test by dispersion of life-satisfaction across time and na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 Veenhoven, R. and Kalmijn, W.M. (2005)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in na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 Veenhoven, R. and Michael Hagerty.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3): 421-36

**서 인 석:** 성균관대학교 2013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학위논문: 국회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현재 숭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Travel Grant 지원사업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 및 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커뮤니티웰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지방정부연구, 2015)”,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 분석(지방행정연구, 2014)”, “주관적 웰빙과 소득(지방행정연구, 2015)”, “지방정부 가치척도로서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한국행정연구, 2015)” 등 이외에 다수의 연구물을 학술저널에 게재하고 있다. (inseok800414@naver.com)

**우 창 빈:** 성균관대학교에서 2012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학위논문: Investigating Contextual Determinants of Happiness: with Reference to Seoul Citizens),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웰빙, 삶의 질에 대한 공공정책적 접근과 이의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한 적용, 그리고 정책적 함의이며, 관련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행정논총, 2014), “대안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이론 모색: 행복론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Investigating Contextual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Seoul Residents”(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행정논총, 2013) 등이 있다. (changbinwoo@gmail.com)

**기 영 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Ph.D(논문: A Study of Adult Education Needs of Korean Americans: Barriers to Participation, 1993)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커뮤니티웰빙, 공무원HRD, 노인인력개발이며, 관련논문으로는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지방자치학회보, 2014)”,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4), “Sing, Dance, and Be Mer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Development?”(Asian Social Science, 2014), “Promoting Community Wellbeing: The Case for Lifelong Learning for Older Adults”(Adult Education Quarterly, 2014) 등이 있다. (key@ssu.ac.kr)

## 부록

[서울시 불평등 구간 값 및 지니계수]

행복구간		행복의 누적백분율	인구의 누적 백분율
1		0.0	0
2		0.0	0.2
3		0.4	0.8
4		2.0	3.6
5		8.9	12.9
6		30.2	36.7
7		65.9	71.6
8		90.7	92.9
9		99.9	99.9
10		100	100
전체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의 합 (평등구간 넓이)
5000	1-2구간	0.24	3479.7
구간	2-3구간	2.01	
	3-4구간	11.73	
	4-5구간	54.53	
	5-6구간	195.32	
	6-7구간	480.24	
	7-8구간	783.16	
	8-9구간	953.07	
	9-10구간	999.39	
불평등 구간의 넓이			1520.3
지니계수			0.304

